

尹, 양곡법 재논의 건의에 “의견 존중…숙고후 결정”

정부 국무회의서 부작용 우려 당정협의 등 거부권 명분쌓기 민주 “재발의 할 것”…대치 심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권과 야권의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정국이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대통령실 이도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한 농림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구두 보고가 있었다”며 두 장관의 보고 내용을 전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황근 장관이 먼저 “(개정안 시행시)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 초과 생산량이 63만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어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까지 33개 농업인 단체에서 반대 성명서를 냈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도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

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양곡매입 단가가 현재 kg당 2천677원인데 3년 비축 후에 주중용으로 판매 시 kg당 400원에 불과한 수준이라 재정에 큰 손해를 안겨준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 내용을 청취한 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에선 주무부처 장관들의 국무회의 보고와 당정 협의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도 관측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로 약 7년 만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의 대치가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외에도 이른바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등도 강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이 추가로 법안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면서 정국은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서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을 찾아 '1천원 아침밥'을 먹으며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외부인 식권(4,000원)을 구매해 식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힘 2030지지율 하락에 ‘비상등’…“함께가야” 이준석계에 손짓도

10%P 빠져…민주당에 역전

김기현 연일 청년층 구애 행보

국민의힘 지도부가 3·8 정당대회 이후 다시 한번 당의 취약 기반으로 확인된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80년대생’ 최고위원들이 주도한 MZ세대와의 치맥 회동에 이어 김기현 대표는 28일 대학 학생 식당에서 ‘1천원 아침밥’을 먹는 일정을 소화하는 등 다각도로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당에서는 폐지했던 청년층을 부활하고 이준석 전 대표 때 도입했던 청년 대변인 공개 선출 제도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론의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 청년 지지층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상등’이 켜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내년 4월 총선에서 20·30세대는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높은 지지를 보낸 바 있으나,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내년 총선은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24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전국 성인 2천506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응답률 3.3%)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7.9%로, 더불어민주당(45.4%)보다 낮았다.

특히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은 20대 33.2%, 30대 35.8%였고, 민주당은 20대 40.0%, 30대 41.3%였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에 즈음해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와 비교하면 약 10%포인트(p)씩 빠진 것이다. 지난해 5월 2주 차 조

사에서 국민의힘의 20대, 30대 지지율은 각각 44.7%, 44.8%로 민주당보다 높았다.

주 69시간 근로제, 저출생 대책 등 정책 혼신을 비롯해 김기현 대표 지도부의 ‘진윤(진윤석열) 편중’ 구성 등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 대표는 이날 “청년층 지지율 하락”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여당답게 대한민국을 살기 좋게 만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식으로 미래 희망을 만들어야하면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지지율이 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정책’에서 원인과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당 지도부에서 ‘이준석계 끌어안기’로 해석되는 발언이 이어지는 것도 주목된다. 이들은 구심점 삼아 청년층 표심을 붙들어 매는 전략을 타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尹 “강력한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 기조 유지”

국무회의, 내년예산 670조 안팎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

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당정 협의의 강화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방미 앞둔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 이상기류

안보실장 거취 문제까지 거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민 방문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외전비서관과 외교비서관이 연이어 교체된 데 이어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 거

취 문제까지 대통령실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상외교 최고 이벤트로 꼽히는 ‘국민 방미’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와 맞물린 인사조치 성격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안보실 이문희 외교비서관을 교체했다.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세워 두 비서관의 연이은 교체 배경에 동일한 중대 사안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복수의 전언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방미 일정을 두고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참모인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거취 문제까지 일부 언론을 통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